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1

유엔 인권최고대표, “인권 보호 장치 마련 전까지 인공지능(AI) 사용 중단해야”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9월 15일(현지 시간),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인공지능(AI)의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용되는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명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AI와 인권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프로파일링, 자동 의사결정 및 머신러닝 기술 등을 포함하는 AI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생활 권리 및 건강권, 교육권, 이동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대규모 데이터에 의존하여 운용되는 AI가 종종 개인 정보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취합 및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AI가 기반을 두고 있는 데이터 모음은 오류 및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만료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고, 불완전한 정보들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킬지 알 수 없기에 장기간의 데이터 저장 역시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AI가 도움을 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부정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인권최고대표는 “AI는 우리의 육체, 정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누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채용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I의 편향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차별적인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위험성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최고대표는 “의사 결정의 도구로 AI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AI 기술이 인권에 가하는 위협을 확인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과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및 회사에서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최고대표는 “AI 개발 및 운영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환경, 알고리즘 등 기술의 복잡한 성질과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의도적인 비밀 유지 정책으로 인해 대중들은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AI라는 문명의 이기가 인류에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기술사용에 대한) 뚜렷한 경계를 정하지 않거나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운용되어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AI로 인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risks to privacy demand urgent action – Bachelet \(15 Sept 2021\), OHCHR Media Centre](#)

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2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제인권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8월 27일 송부한 서한에서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안 내용이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과될 경우, 한국 내 정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인 만큼, 해당 규약 제 19조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에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정 없이 채택될 경우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점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칸 보고관은 ‘법률의 적법성’ 측면에서 2017년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등에 대한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정보와 사상을 전하는 인간의 권리는 정확한 주장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위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는 행위가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3항 혹은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형태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고 있다. 칸 보고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조항에 대한) 임의 해석과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징벌적 배상을 매기도록 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언론중재법 개정안 30-2조)’ 속 “매우 모호한 표현”이 “언론보도와 정부나 정치지도자 혹은 기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교적 인기가 적거나 소수가 지지하는 의견 등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대한민국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를 지나게 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칸 특별 보고관은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 반박을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패러디나 유머 차원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정보의 허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또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자기 검열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공익과 관련한 토론의 기회를 억압할 수 있어 이 점이 크게 우려된다”며 “완전히 불균형적”인 조항이라 지적했다.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이와 같은 우려를 국회와 공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 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3

유엔 보고서: “미얀마 인권 참사 사태 종결 위한 조치 마련되어야”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9월 23일(현지 시간), 미얀마 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최고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미얀마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왔다.

타트마도(무장 군부를 지칭하는 미얀마어)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9월 현재까지도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 혹은 전쟁 범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경제 불황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권 참사 사태”라 묘사하였다. 또한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민에 대한 무력 사용 및 대규모 체포를 감행하는 등 지난 2월부터 몇 달 간 국민의 생명권, 자유 및 안전 권리, 고문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심판을 받을 권리, 발언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초기, 미얀마 군은 비교적 치명상을 적게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여 반(反)군부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시민들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는 등 공포를 조성하였다. 군부의 진압은 시민들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사용하고 저격수를 투입하는 등의 상황으로 격화되었다. 미얀마 국군의 날인 3월 27일에는 미얀마의 15개 주(洲) 및 지역 중 12개 주에서 시위대가 군부의 공격을 받았고, 이 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아동 17명을 포함하여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시위대, 언론인, 공무원 등을 포함한 약 8,000여 명의 사람들이 군부에 체포되었으며, 이중 120여 명이 구타, 굶주림, 고문 등 악조건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같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군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도 점점 거세어지고 있으며, 군부-반군부 간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수천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하거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단행되어야 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미얀마 내 인권 침해 종단을 위해 개입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국민들이 직면한 상황은 참혹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4. UN 소식

유엔 사무총장,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 성명서 발표

사랑하는 이들과의 교류, 종교 행사 참석, 의견 표출 등 대면으로 진행되던 일상의 여러 일들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이동 제한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기술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은 노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세계 노인의 날의 주제는 "모든 세대를 위한 디지털 공정성"이며, 이번 세계 노인의 날은 사회 내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종종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상에서 범죄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부도덕한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안이 동원되고 있으나, 노인들이 이러한 범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노인은 단순한 취약 계층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경험의 원천이며, 집단적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그 기술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세계 빈곤 퇴치 실현, 지구 보호, 인류의 건강, 평화, 번영을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역량과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세계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디지털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 및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처: [Secretary-General's message on the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30 Sept 2021\), The United Nations Official Webpage](#)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일 시	회의명
2021/10/2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간담회

▲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일 시	회의명
2021/10/18-10/29	GANHRI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등급 심사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등급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일은 10월 22일임.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일 시	회의명
2021/10/26-10/27	제 1차 노인인권 국제포럼 주제-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resent and Future)

▲ UN

일 시	회의명
2021/11/1-11/1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이지현 ljh820@nhrc.go.kr